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의안번호 제41호)

- '98. 12. 23.
-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98. 12. 5 서초구청장
- 나. 위원회 회부일자 : '98. 12. 5
- 다. 상정일자 : '98. 12. 23
- 라. 위원회 개최회수 및 일수 : 제83회 정기회 중 총무재무위원회
제10차 회의 상정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가. 제안이유

- 정부의 조직개편지침에 따라 행정조직운용에 따른 자치단체간의 균형과 통일성을 유지하고, 정원관리를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 관련근거에 지방자치법 제103조를 추가
-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본문으로 규정
- 제3조의 “직급별 정원”으로 규정하던 것을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으로 세분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김재근)

가. 검토내용 : 생략(검토보고서 참조)

나. 검토결과

☐ 공무원의 정원의 근거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의 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하던 것을 지방자치법 제103조를 추가하여 행정조직운영에 따른 자치단체간의 균형과 통일성을 유지하고 정원관리를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주요골자는

- 안(제1조) : 목적에 지방공무원 정원의 근거를 지방자치법 제103조를 추가하며,
- 안(제2조) : 정원의 총수를 본문에 규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으로 구분,
- 안(제3조)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동별로 세분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

☐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고
- 행정자치부 자제 12200-379('98.10.19) 기구·정원관련조례모델표준안 지침이 시달되었기에
-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문) 행자부로부터 기구·정원관련 조례 준칙안이 '98.10.19 통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 조례안 제출이 왜 이렇게 늦었는지?

답) 우리구 직제 및 구조조정에 따른 제반사항과 준칙안, 규칙 등을 검토하느라 개정 조례안 제출이 늦어지게 됨.

문) 본 조례안 제1조(목적)에 지방자치법 제103조를 추가한 사유는 무엇인지, 행자부 준칙안에 없었던 것을 검토과정에서 추가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추가한 것인지 아니면 준칙안에 그렇게 되어 있어 추가한 것인지 답변 바람.

답) 행자부 준칙안에 지방자치법 제103조가 포함 되어 있음.

문) 바로 그런 것이 문제임, 상급기관의 준칙안을 그대로 따르다 보니 그런 것임. 이 조례는 '98.10.2 개정 하였음. 그 당시 개정때 좀 더 관련법규를 세밀히 검토하여 지방자치법 제103조를 추가 하였다면 지금 다시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봄. 앞으로는 조례안을 제출할 시에는 상급기관의 준칙안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나름대로 관련법규 등을 검토하여 제출하기 바라며, 또한 조례 제·개정사항이 있을시에는 신속히 의회에 제출하여 의사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주기 바람.

답)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음.

5. 토론자 및 토론요지 : 해당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만장일치)

8. 소수 의견의 요지 : 해당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10. 체계자구 정리내용 : 해당없음.